

[종합·해설]

국회 제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니

광주, 자치구 없애고 광역시 체제 유지

무안반도·광양만권 통합 논의 재점화될 듯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가세해 지역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다 이를 구체화한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에서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설불리 이 문제를 다룰 경우 지역 및 자치단체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정치권 행정체제 개편 논의=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하나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어 24일 민주당 박기준, 25일 하나당 허태열 의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해 제출했다.

허태열, 권경석, 우윤근 의원의 안은 대동소이하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인접 시·군·구를 합쳐 60~70개의 통합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권경석, 우윤근 의원은 광역자치 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국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을 수행하는 광역 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허태열 의원은 시·군·구 통합이 3분의 2 이뤄진 이후 '도'의 기능과 지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광주·전남은 어떻게 돼?=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의 무안반도와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 통합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90년대 이후 목포를 중심으로 네 번에 걸쳐 추진된 바 있다.

전남 동부권은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한데 이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둔 지난 2007년부터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의 광역권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허태열 의원의 특별법안에 따라 전국을 60~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한다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산하 자치구 단위가 없어지고 현재와 같은 광역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17대 국회 때도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데 공감했으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한나리당 허태열 의원 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도를 폐지하고 5~7개의 광역시와 60~70개 통합 자치단체로 개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4대강 살리기 면적당 사업비 영산강 최다"

현장점검 전남 방문한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 사업비가 낙동강 쪽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역 면적 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점검차 25일 전남을 방문한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영산강 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동강 사업은 9조 7

천억, 한강은 2조, 금강은 2조 4천억, 영산강은 2조 6천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낙동강은 다른 세 강에 비해 길이가 가장 길고 흔수·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하류지역은 갈수기 수질이 전국 최악입니다. 반면 영산강은 하천 연장이 가장 짧고 유역면적도 가장 적은 강입니다.

최 차관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4대강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관광·환경·생태축면에서 놀랄 만큼 좋았습니다."

최 차관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타 지역 사업보다 내실 있게 짜여졌다며 "이명박 정

이라고 강조했다.

/최원기자 cki@



최장현 국토부 제2차관(맨 왼쪽)이 25일 오후 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중 선도사업이 진행중인 나주시 죽림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내년 10월 개막할 포뮬러원(F1) 대회를 앞두고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에서 경주장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F1 8개팀 영암대회 불참→참가 번복 왜

FIA 예산상한제 일단 취소

〈국제자동차연맹〉

반쪽 대회·홍행 악영향 우려 합의

내년 F1 대회 불참과 다른 시리즈 독자 운영 선언으로 세계모터스포츠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F1 주요 경기 팀 단체인 '포타'(POTA·Formula One Team's Association)가 FIA(국제 자동차연맹)와 극적인 협상을 통해 불참을 번복하면서 내년 F1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내년 F1대회의 경우 첫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들 F1 주요 경기팀 참가 확인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요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FIA와 FOTA의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상한제'였다. 페라리와 맥라렌 등 F1대회 8개 주요 팀이 가입한 포타는 그동안 수익배분과 경기진행 방식, 예산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FIA와 갈등을 빚어 왔었다.

'예산상한제'는 F1 경주팀이 대회에 투입하는 경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FIA는 애초 신생팀이나 소규모 팀이 더 많이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년

보류하고, 2년 내에 각 팀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웹피언십에서 사용했던 수준으로 비용을 줄인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2년 내 예산 절감이 이뤄질지 미지수여서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FIA가 예산상한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FOTA 소속 팀들이 F1대회에 불참할 경우 대회 흥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년 코리아 그랑프리도 '반쪽대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FOTA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현 FIA 회장 맥스 모즐리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FOTA의 '대회 불참' 강수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모터스포츠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FIA는 자율적 예산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상한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FOTA 소속 8개 명문팀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관찰함으로써 양자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은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원기자 cki@

교통요지 대로변 최고의 "황금상권"

운암동 "로데오 빌딩"

확! 달라진 분양·임대 조건!!

고객중심의 평형대분양·임대 가능!

사용편의와 교통 편의 운암동 최고의 실크로드!!

• 편리한 교통 편의 + 풍미 있는 상권 풍미 있는 상권

• 편리한 교통 편의 + 풍미 있는 상권 풍미 있는 상권

2안세대가 넘는 편안한 고장 고마워보!

대단위 API를 독점하는 최적입지

로데오빌딩

분양·임대

로데오빌딩(주) **2F** **3F** **4F** **5F** **6F** **7F**

분양·임대의 대상은 **562-571-5600, 511-7878**